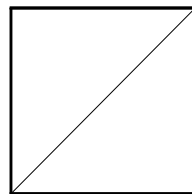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67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9. (제6차)

의
결
사
항

(주)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3. 29.

1. 의결주문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22.6.7.~2022.7.1. 기간중 케이뱅크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채무 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은행법」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은행법」에서 정한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의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약관 변경시 공시 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舊「은행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의무 및 「은행법」에서 정한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내용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주의’ 조치를 건의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3.3.2.) 심의필
- 제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3.23.) 심의필

<별지>

(주)케이뱅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케이뱅크 : 과징금 2억 1,300만원 부과

- 조치 사유 :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 법적 근거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 제1항, 제20조 제3호

○ (주)케이뱅크 : 과태료 2억 1,64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라.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바.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장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사.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아.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 법적 근거 : 「채권추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제3호, 「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은행법」 제34조의2, 제69조 제1항 제5의2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1조 및 <별표>2.카.,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지배구조법」 제20조 제3항, 제43조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제69조 제5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舊「은행법」 제52조의3, 제69조 제1항,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은행법」 제52조의2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75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및 [별표3]

□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이 건의

- 팀장 ◆◆◆ : '주의' 건의
- 팀장 ★★★ : '주의' 건의

○ 조치 사유 :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 법적 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5조의2 제3항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케이뱅크(이하 '은행이라 함') ☆☆☆팀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변동 내역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xx.x.x. ~ 20xx.x.xx.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x전, x억 x,xxx만원)

* 대주주가 업무 비협조 등으로 특수관계인 선임사실을 실시간으로 은행에 제공해주지 않아 특수관계인 변동내역 파악이 어려움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내역 >

(단위 : 억원)

순번	대주주 소속집단 (소속회사, 직위)	차주	특수관계인 포함일	신용공여 발생일	신용공 여 금액	신용공여 확인일	여신 상환일
1	□□□□□□ (□□□□□□□□□□ □□□□ 대표이사)	◀◀◀ (신규)	20xx.x.xx.	20xx.x.xx.	x.x	20xx.x.xx.	20xx.x.xx.
2	□□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xx.xx.x.	x.xx	20xx.x.xx.	20xx.x.xx.
3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xx.xx.x.	x.x	20xx.x.xx.	20xx.x.xx.
4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xx.x.x.	x.x	20xx.x.xx.	20xx.x.xx.
5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xx.xx.xx.	x.xxx	20xx.x.xx.	20xx.x.xx. 임원 퇴임
6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20.xx.xx.	x.x	20xx.x.xx.	20xx.x.xx. 임원 퇴임
7	□□□□□□ (□□□□□□□□□□ 기타비상무이사)	♥♥♥ (신규)	20xx.x.xx.	20xx.x.xx.	x.xx	20xx.x.xx.	20xx.x.xx. (대출취소)
8	□□ (□□□□□□□□,□□ □□□□□□□□ 기타비상무이사)	♣♣♣ (연장)	20xx.x.xx.	20xx.x.x.	x	20xx.x.xx.	20xx.x.x.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팀 등)은 시스템 대량 전송 오류 발생내역에 대한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20xx.x.x.~20xx.x.xx.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x,xxx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xx건)한 사실이 있음(총 x,xxx건 위반)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20xx.x.xx.~20xx.x.x.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xx건 위반)

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채권추심법」 제8조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 부존재 소송 진행 중 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

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x건)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x건)

라.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3만원 이하 물품, 식사 등)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x건, xx,xxx,xxx원)

< 프로모션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준법감시인 미보고 명세 >

순번	프로모션명	실시기간	재산상 이익			총 금액 (단위 : 원)
			제공부서	제공대상	제공일자	
1	□□□□□ □□□□	20xx.x.x.~ 20xx.xx.xx.	♣♣팀	□□□□ □□□□ □□고객	20xx.x.xx. ~20xx.x.xx. .	□□,□□ □,□□□
2	□□□□ □□□	20xx.xx.x.~ 20xx.xx.xx.	◆◆팀	□□□□ □□ 고객	20xx.x.xx.	□□□,□ □□
3	□□□□ □□ □□□□	20xx.xx.xx. ~20xx.xx.x x.		□□□□ 고객	20xx.xx.x.	□□□,□ □□
4	□□□□ □□ □□□	20xx.x.x.~ 20xx.x.xx.		□□□□ □□ 고객	20xx.x.x.	□□,□□ □,□□□

마.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팀)은 20xx년 하반기 및 20xx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각각 x,xxx일, xxx일씩 지연제출하였음 (x건)

<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현황 >

구 분	보고대상기간	보고기한	실제 보고일자
20xx년 하반기	20xx. xx. xx.~20xx. xx. xx.	20xx. x. xx.	20xx. x. xx.
20xx년 상반기	20xx. x. x.~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바.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1) 금융거래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 ☐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xx건)

< 금융거래 약관 제정 및 변경 관련 법규위반 >

구 분	약관명	시행일자	법상 기한	보고일자
보고의무 위반 (□□건)	□□□□ □ □□□□□□ □□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 도과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xx건)

<전자금융거래약관상 공시의무 및 고객통지의무 위반>

약관명	시행일자	법상기한	공시 및 통지일자
□□□□□□□□_□□□□□□ 약관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20xx-xx-xx (지연통지)
□□□□□□□□_□□□□□□ 약관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20xx-xx-xx (지연통지)
□□□□□□ □□□ □□약관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미통지
□□□□□□□□약관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미통지
□□□□□□□□약관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미통지
□□□□약관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미통지
□□□□□□□□약관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미통지
□□□□ □□□□ 약관 ¹⁾	20xx-xx-xx	20xx-xx-xx	20xx-xx-xx (지연공시)
□□□□□□□□□□ □□약관	20xx-xx-xx	20xx-xx-xx	미통지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_□□□□□□ 약관	20xx-xx-xx	20xx-xx-xx
□□□□□□□□_□□□□□□ 약관	20xx-xx-xx	20xx-xx-xx
□□□□□□□□ □□ 약관	20xx-xx-xx	20xx-xx-xx
□□□,□□□□ □□□ □□□ □□□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약관	20xx-xx-xx	20xx-xx-xx
□□□□□□(□□/□□□/□□□)□□약관	20xx-xx-xx	20xx-xx-xx
□□□□ □□□□ 약관 ¹⁾	20xx-xx-xx	20xx-xx-xx
□□□약관 ¹⁾	20xx-xx-xx	20xx-xx-xx
□□□□□□(□□/□□□/□□□)□□약관 ¹⁾	20xx-xx-xx	20xx-xx-xx

사.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미흡 현황 >

구 분	광고명	광고내용	광고기간	소관부서
사전심의 미 실시	□□□□ □□□ □□□□ ¹⁾	□□□□□□□□□□ □□□□ □□□ □□□	‘xx.xx.xx.~xx.xx.	
	□□□□ □□ □□ ¹⁾	□□□□□□□□□□ □□□□ □□□ □□□	‘xx.xx.xx.~xx.xx.	
심의필 표시 미 기재	□□□□ □□□ □□□ □□□□□ ¹⁾	□□□□ □□ □ □□ □□□□ □□□□□□ □□□□ □□ □□	‘xx.x.xx.~x.xx.	■■■■팀
	□□□ □□□□	□□□□ □□□□□□ □□□ □□□□, □□□/□□□ □□ □□ □□□ □□ □□, □□□ □□□ □□ □	‘xx.x.x.~x.xx.	
	□□ □□ □□□	□□□□ □□□□ □□□ □□□□□ □□□ □□□□□□□	‘xx.x.xx.~x.xx.	☞☞☞팀
	□□□□□ □□□□□ □□ □□□	□□□□ □□□□ □□□□□ □□□□□□□□□□	‘xx.x.xx~x.xx.	○○○○팀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 도과

아.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 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 은행(○○팀 등)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x건)

< 대출상품 공시 및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위반 현황 >

대출상품명	출시일	위반내용
□□□□□□□ ¹⁾	20xx.x.x.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공시사항 누락 및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미실시
□□□□□□□□□□ ¹⁾	20xx.x.x.	
□□□□□□□□ ¹⁾	20xx.x.x.	
□□□ □□□□ ¹⁾	20xx.x.x.	
□□□□□□□□ ¹⁾	20xx.x.xx.	
□□□□□□□□□□	20xx.x.xx.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 도과

관 계 법 규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1.~2. (생략)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개정 2020. 3. 24.>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 5. (생략)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 8. (생략)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 11. (생략)

② ~ ④ (생략)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19.>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제1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 5. (생략)

제24조의5(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별표3 각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생략)

[별표3]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1. ~ 37. (생략)

38.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약관의 제정·변경의 보고 접수 및 신고 수리

39. ~ 62. (생략)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처.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3,000

□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舊) 은행법」

제52조3(광고) ①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구체적 내용, 광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9. (생략)

10. 제52조의3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은행

② ~ ⑥ (생략)

□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6(광고) ① 은행은 법 제52조의3에 따라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② ~ ③ (생략)

□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광고) ① ~ ④ (생략)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舊)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6조(광고관련 세부사항) 규정 제90조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광고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능한 광고의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생략)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 8. (생략)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한 자

② ~ ③ (생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생략)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법 제8조	1,00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4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보관기간 : 5년)																	
관리 번호	요구 일자	요구 기관	요 구 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법적 근거	요구받은 인적사항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 일자	제 공 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명약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제 공 된 인적사항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담당자	책임자		통보 유예를 한날	사 유			기 간	횟 수		
			담당자	책임자													

1. 사용목적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요구받은 인적사항 및 제공한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3. 통보를 유예한 경우 사유 : 법 제4조의2 제2항 각호중 해당번호를 기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아)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 7. (생략)
- ③ ~ ④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150	300	70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생략)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 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1,8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① ~ ② (생략)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생략)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⑤ (생략)

-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51조(과태료) ①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 (생략)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0~12.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1~1의3. (생략)
-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 2~5. (생략)
- ② (생략)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단위: 만원)
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3항제8호	600
러.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3항제9호	6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약관교부 방법 등) ①~③ (생략)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④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라.~마. (생략)

3. 현지조치사항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⑧ (생략)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 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2020.5.13. 개정)

1. (생략)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략)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생략)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개정 이전의 경우 100분의 30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7) (생략)

-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마. (생략)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2017.10.19. 개정)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생략)

나. 감경 사유

(1)~(2) (생략)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생략)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9)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생략)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감면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 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직원 제재의 감면) ① 제45조에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양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5. (생략)
 6. 규정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③ (생략)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 ①~② (생략)
-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견책~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 제, 2016.2.29.>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정책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은행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82 02-2100-2833 02-2100-2971 02-2100-2696	02-3145-8345